

**2017**년 **10**월 **16**일 **월**요일 (음 8월 27일)

# 전주매일

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중치료 전문 에인 앤웨 의위 원장 곽 경 문 🛣 (063)220-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

www.jjmaeil.com

대표전화(063)288-9700

# 환경오염 유발 공장 10년간 8245개 난립

제 1907호

▶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, 산자부 국감서

1996년부터 규제완화 미명아래 산집법 25번 뜯어고쳐 이명박 정부 초기 입지기준 고시 법률 반영없이 폐지

최근 주택가 인근 공장 난개발로 인 해 유해물질과 소음 등 환경오염 피 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 운데,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공장 설 립 규제완화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 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(국민 의당·익산을)이 산업통상지원부로부 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, 최근 10년간(2008~2017.9) 레미 콘, 아스콘 제조업 등 환경오염을 유 발하는 공장 신규등록 현황은 총 8,245건에 이르며, 연 평균 약 840개 가량의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공 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.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등록 기 준에 따른 현황이며, 시스템에 등록 되지 않은 미등록 공장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

산업부는 1996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'산집 법') 개정을 통한 공장설립 승인 건 축면적 기준 규제완화(200㎡->500㎡) 이후 승인이 필요 없는 미등록공장에 대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 며, 다만 통계청의 전국제조업사업체 수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등록공장 수를 제하는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 다. 이 경우에 등록되지 않은 공장은 2013년 20만6,558개(등록공장 16만 4,058개), 2014년 22만6,040개(등록공 장 17만1,131개), 2015년 23만2,818개 (등록공장 18만1,031)로 등록공장 수 보다 월등히 많다.

한편, 1996년 건축면적 규제완화 이 후에도 법률 4건, 시행령 13건, 시행 규칙 7건, 고시 1건 등 총 25건의 산 집법 개정이 이뤄졌으며, 특히, 2008 년 MB정부 초 '창업절차 간소화'라 는 주제로 이루어진 제2차 국가경쟁 력강화회의를 통해 공장입지기준 고 시 제5조(환경오염등을 일으킬 수 있

는 공장의 입지제한)가 법률에 반영 없이 폐지되기도 했다. 그 당시 이명 박 대통령은 '가장 좋은 정부는 다 풀어주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는 것'이라며, 법안 고치고, 지침, 규정 만 고쳐도 많은 규제를 없앨 수 있 다'고 장관들에게 고시 폐지 등의 규 제완화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

당시 고시 폐지 직후 이전에는 승인 이 나지 않던 김포의 A 레미콘 공장 이 설립 승인을 받아 주택가 인근에 들어섰고, 비산먼지와 소음유발 등으 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극심한 피 해를 끼치고 있으며, 사업주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더욱 심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.

조배숙 의원은 "국민의 건강권, 환 경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치 임에도,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공장 난립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이 심각 한 위협을 받고 있다"며, "산업부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실태조사 뿐 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 ~ 장 설립 시 주민동의 절차를 반드 시 거치게 하는 등의 산집법 개정 그리고 환경부, 국토부 등 관계부처 와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범정부 차 원에서의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 다"고 강조했다. /김진성 기자



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에서 '후백제 유적 추정지 현장 탐방 및 브리핑'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유철 전주문화유

## 후백제 역사문화 유적지 체계적 복원 착수

전주시, 후백제 왕성 · 도성 등 시굴 · 발굴조사 추진 성곽 등 34개소 신규 발굴… 연차별로 유적 성격 규명

전주시가 1000년 넘도록 역사에서 잊혀온 후백제 역사문화를 체계적으 로 복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굴조사 에 나선다. 전주는 900년부터 936년까 지 37년간 후백제의 왕도(王都)로서 후삼국시대 격동의 중심지이자 찬란 한 역사문화를 펼쳤던 후백제의 역사 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.

시는 후백제의 왕성 및 도성으로 추 정되는 노송동 등 전주시 전역에 산 재한 후백제 유적을 찾는 정밀지표조 사 결과를 토대로 후백제 역사유적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. 후백제 역사유적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조사 는 이번이 처음이다.

이를 위해, 시는 후백제 왕성으로 알려진 물왕멀 일원, 도성으로 추정 되는 동고산성과 남고산성, 오목대 등 약 1,653만㎡(500만평)을 대상으로 후백제 유적을 찾기 위한 정밀지표조 사를 실시했으며, 분묘유적과 성곽유 적, 건축유적, 생산유적, 생활유적 등 34개소를 신규 발굴했다.

특히, 정밀지표조사 결과 후백제의 왕성은 인봉리 일대(3,265㎡)로 추정 됐으며, 최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 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동쪽부분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제방시설 하층 에서 통일심리에서 고려시대의 기와 등이 확인돼 왕성과 관련된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는 판 단하고 있다.

또한, 남고산성 내의 추정 행궁지의 경우 후백제 때 사용되었던 초석이나 기단석들과 기와들이 수습돼 후백제 시대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. 또, 이중저수지 인 근 무릉고분군은 인위적으로 만든 대 형 분묘형태로 조성돼 있으며, 산 정 상부에서는 정연하게 배열된 숯이 발 견되었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향 후 후백제와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.

이와 함께, 생산유적인 왜망실의 우 이동 와요지에서는 수많은 기와편과 가마벽체펀 등이 발견됐고, 네모 형 태의 전돌편(길이 25cm, 두께 6cm)도 확인되고 있어 후백제 관아시설에 필 요한 기와 및 전돌 등을 공급했던 지 역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.

시는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후백제

왕조의 기반을 조성하고 터전을 마련 한 다양한 유적들이 지표상에서 확인 되고, 유역이 전주시 전역에 걸쳐 분 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유적의 성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.

동시에, 시는 현재 후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향후 후백제 문화유산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'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수립 용역'을 추진 하고 있으며, 이 계획이 완성되면 연 차별로 예산을 투입해 후백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, 정비사업 등 을 진행할 계획이다.

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'전주시가 후백제의 왕도(王都)라고 하 지만 그 구체적인 유적에 대해서 집중 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" 이라며 "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가 확보된 만큼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후백제 역사를 재조명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 /김민근 기자

### 본사인사

▲이양원 임:부장

### 검찰, 朴정부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이번주 배당

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한 배당 절차를 이번주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 할 전망이다.

대검 관계지는 지난 13일 "청와대로부 터 수사 의뢰된 시건 내용을 면밀히 검 토한 뒤 내주 초·중반께 이를 담당할 검찰청에 이첩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

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청은 사안에 따라 수사 부서를 결정한다. 국정원 댓글 사건, '화이트 리스트' 수사 등 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시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.

청와대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

장,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함에 따라, 이들을 상 대로 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 이다. 청와대는 이들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,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

이미 김 전 비서실장은 '블랙리스 트 작성 및 활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. 김 전 안보실장 역 시 국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사건 의 윗선으로 지목돼 소환이 임박했다 는 관측이 나온다.

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 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 정부가 대통 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(대 통령 훈령 318)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.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.

청와대는 전 정부가 최초 대통령 보 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. 대 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'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 닌 안전행정부 담당'등으로 고쳤다 고도 판단했다.

청와대는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 소에 제출해 대통령 탄핵 공방 법리 자료로 사용했다고도 알렸다.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점 등도 문제가 된 다고 봤다.

명:편집국 순창주재기자

(10월 13일자)

